

대북정책의 과제와 남북관계 전망

서 재 진 (통일연구원 원장)

1. 서론

최근 김정일 건강이상설이 발표된 이후 우리 사회의 관심과 화두는 김정일 건강 이상의 진상, 김정일 이후 권력구도, 정책방향 등의 북한의 미래에 쏠리고 있다.

이에 앞서 금강산관광객 피살사건이 남북관계에 대한 관심변화에 먼저 한 몫을 하였다. 10년간의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한 결과로 얻은 남북관계가 본질은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 북한이 남한을 대하는 태도가 적반하장격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래 저래 우리 사회의 관심은 남북대화, 남북관계보다는 북한의 향방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관심 변화는 매우 현실적이다. 북한문제의 본질은 북한체제의 비정상성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김일성·김정일 세습체제가 종언을 고하면 북한체제의 비정상성이 점차 개선될 것이며 그러한 변화는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새로운 국면으로 이행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 글은 북한의 변화하는 실태를 감안하면서 향후 5년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남북관계에서 추구해야 할 과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 등을 살펴보고, 향후 남북관계의 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2. 대북정책의 새로운 과제

지난 10년간 대북정책의 핵심은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는 것이었다. 남북간에 대화만 유지되면 남북관계가 잘 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북한이 대화에 호응하는 한 북한이 변화한다고 생각하였다. 북한을 대화에 끌어내기 위하여 식량지원, 비료지원 등 지원을 하고 대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북경협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민간기업이 손해를 보더라도 재정지원으로 손실을 보전해주면서 지속하였다.

그래서 북한은 ‘대화’라는 카드하나로 남한을 끌고 다녔다. 우리는 인도적 지원, 일방적 경협을 하면서도 북한의 요구대로 끌려다녔다.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경제적 지원 외에는 북한을 움직이는 수단이 없었다.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난 10년간의 남북교류를 통하여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였다고 생각하고 물길 바로잡기를 위한 대북정책 조정을 시도하려는 참에 북한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방과 협박을 하면서 남북관계의 판을 깨었다. 남북관계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알 수 있는 사건이다.

이러한 북한의 최근 대남 행태를 볼 때 한국이 이전 방식의 대북정책을 되풀이하

는 것은 전략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현실적이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실패한 체제인 북한에 끌려가는 대북정책은 현실적이지 않다. 세계 10대 경제강국이 된 남한이 세계 10대 빈국인 북한에 좌지우지당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과거 정부의 경제논리에 맞지 않는 정치논리에 의거한 경험은 기업의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지속될 수 없으며 정치바람에 휘둘리기 마련이다. 경험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재정을 투입하는 남북경협은 경제협력이 아니라 경제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기교라고 평가하는 입장도 있다.

지난 10년간 대화를 최고의 선으로 상정한 대북정책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이제 대북정책의 새로운 목표는 북한의 개혁·개방이어야 한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모두 개혁·개방하여 경제와 민주화에 성공하였듯이 북한도 개혁·개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대북정책의 목적이어야 한다. 소위 ‘북한문제’의 핵심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는데서 오는 문제이다. 개혁·개방하지 않음으로써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국제사회에 정상적인 일원으로 편입되기를 기피하며, 경제난이 심화되어 매년 우리의 재정으로 식량과 비료를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추진하던 80년대초에 북한도 적극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하였더라면 차기 올림픽은 평양에서 개최될 수 있었을 것이다. 만약 북한이 올림픽을 개최할 정도로 국력이 신장되었다면 남한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면 지금쯤은 남북간에 경제공동체 형성이 실질적으로 진전되어 사실상의 통일에 이를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북한이 우리식 사회주의, 또는 폐쇄주의를 고집하면서 개혁·개방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핵문제로 갈등하고 있으며, 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 문제의 본질을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김정일의 개인숭배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제는 북한에 대한 개혁개방 문제와 인권문제라는 카드를 가지고 북한을 관리해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으로서 상생·공영의 대북정책과 비핵·개방·3000 구상이다.

3.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의 내용

가. 정책의 기초: 상생·공영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의 명칭이자 기초는 남북 상생·공영(mutual benefits and common prosperity)이다.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고,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상생·공영은 두가지 배

경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발전되기가 어려운 것은 북한이 체제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남한으로부터의 흡수통일을 우려하여 남북관계 진전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북한의 흡수통일이나 체제붕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주려는 의도에서 상생·공영이라는 개념이 대북정책의 이름으로 붙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는 북한의 경제발전을 통하여 남한도 경제발전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회를 얻게되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 경협을 통하여 북한과 남한이 동시에 경제적으로 이득을 창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상생·공영 정책은 2008년도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되었으며, 7월 11일 국회 개원 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과 공영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라고 밝힘으로써 상생·공영은 대북정책의 명칭과 기조로 정해졌다.

상생·공영은 1991년에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키워드인 ‘화해’와 ‘협력’을 ‘상생’과 ‘공영’ 지향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비핵·개방·3000」 정책이 제시되었다. 북한의 비핵화 유도, 북한의 개방, 상생의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한반도의 경제 선진화 지향, 호혜적 인도협력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남북간의 상생·공영을 실현하기 위한 토대구축을 위하여 비핵·개방·3000 정책은 북한경제 발전의 국내외적 조건 형성과 북한경제 발전을 추구한다. 북한이 비핵화·개방화를 서둘러 경제활동의 국내외적 조건이 조성된다면 북한 경제가 고도성장할 수가 있게 된다. 국제금융의 차입이 용이해지고, 국제자본의 투자를 촉진하기 때문이다. 즉, 북한이 희망하는 국제 개발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다.

북한 핵문제 해결, 체제의 개방화의 과정들이 실현되면 북한 경제는 획기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다. 국제금융기구의 차관 도입이 가능하고, 외자가 유입될 것이며 남북경협도 활성화 될 것이다. 특히 일본 기업의 북한진출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 대북정책이 추구하는 장기적 목표는 한반도에서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이다. 비핵·개방·3000 정책이 이행되면 우리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 차원을 넘어서 우리경제를 한단계 더 도약시키는 출로로 기능할 수도 있다.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철도 및 도로를 러시아에 연결하여 러시아의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을 육로로 수입하고, 나아가 우리기업의 활동무대가 북한과 대륙의 북쪽으로 확대되도록 하는 정책이다. 시베리아로 직접 통하는 TKR-TSR 연결을 통하여 북방에서 가스 등 천연자원을 공급받고, 우리상품의 북방 수출을 도모하여 나아가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간에 경제공동체가 발전하면 장기적으로 남북간에 통일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 정책의 수단: 비핵·개방·3000 정책

비핵·개방·3000 정책은 북한이 핵문제를 해결하여 미국 및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실현하고 자본주의 국제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안보불안을 해소하고 경제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비핵·개방·3000 정책은 중국, 베트남, 러시아,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 세계시장에 편입하여 경제가 고도성장하였던 보편적 발전의 궤적을 북한도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로써 궁극적으로 한반도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발전하여 남북이 상생·공영하는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추구한다.

보다 구체적인 정책수단의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의 비핵화, 개방화를 추진하고 북한이 국민소득 3,000달러에 도달하도록 지원한다는 정책이다.

비핵화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의미하며, 개방화는 북한이 미국 및 일본과의 수교를 실현하여 국제사회의 정상적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3,000달러는 북한의 경제발전이 국민소득 3,000달러에 이를 정도의 경제발전을 의미한다.

또한 북한의 국민소득 3,000달러 실현을 위하여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북한의 수출기업 육성, 산업인력 양성, 국제협력자금 조성, 신경의고속도로 건설,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 지원 등의 5대 패키지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세부 정책을 담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국민소득 3,000달러는 이들 5개 패키지만으로는 실현될 수는 없고 북한이 비핵화·개방화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북한의 비핵화·개방화를 통한 국내외적 환경의 개선, 북한당국의 경제발전의 의지, 남한 및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

3000 비전은 은 북한이 국민소득 3,000달러 수준의 경제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3000이라는 숫자는 한국이 88올림픽을 개최하던 1988년 당시 한국 국민소득이 3,000달러였다는 것을 감안한 수치로서 북한경제가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어 상당한 수준의 자립경제를 달성하고 사회적으로는 중산층이 형성되는 수준을 의미한다.

3,000달러 실현은 세가지 트랙으로 추진될 수 있다. 첫째는 비핵화와 남북경협을 병행하는 부분이다. 현재 핵문제 진전과 무관하게 금강산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향후에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식량지원, 비료지원 등은 핵문제 진전과 무관하게 추진한다.

둘째는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화가 가져올 북한경제발전의 대내외 환경 개선이다. 북한이 비핵화되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고, 개방을 통하여 외자가 투자할 수 있는 내부적 조건을 갖추는 것이다.

셋째는 선거공약으로 천명한 대북지원 5대 패키지¹⁾를 북핵문제 진전에 연계하는

1) 북한의 수출기업 육성, 산업인력양성, 국제협력자금 조성, 신경의고속도로 건설,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 지

부분이다. 북핵폐기 2단계가 종료되면 대북지원 5대 패키지 프로그램 가동에 착수하게 되며, 북핵폐기 3단계가 종료되면 5대 패키지 프로그램 가동을 본격화한다.

북한의 국민소득 3,000달러는 이들 세가지 트랙이 결과적으로 달성하게 될 경제발전의 효과이다. 남북경협을 지속을 통하여 남북관계의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나아가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상응하여 대북경제협력과 경제지원을 확대하며 북한의 비핵화, 개방화를 통하여 경제발전의 국내외적 조건을 개선할 경우, 10년 내 국민소득 3000달러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일방적 지원으로 북한의 경제를 그 수준으로 올려놓겠다는 것이 아니다. 한국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개방화를 유도하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자본 유입을 촉진하고 한국의 기업도 활발히 북한에 투자를 하게 하면, 북한 경제가 자립적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어 10년내에 국민소득 3,000달러를 달성하게 된다는 전망이다.

비핵·개방·3000 정책은 북한이 비핵화의 전략적 결단을 망설이거나 지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핵화와 개방화를 결단하여 조속히 해결하고 나아가서 국민소득 3,000달러를 달성하는 발전의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설득하는 것을 주요 추진 전략으로 포함하고 있다.

결국 비핵·개방·3000 정책은 북한 근대화 (modernization) 방안이다. 북한경제발전과 국제적 협력을 유도해내기 위해서는 비핵화의 실현이 필요하며, 북한 스스로가 국제사회의 정상적 일원으로 편입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비핵·개방·3000 정책은 북한의 비핵·개방을 전제로 하는 정책이 아니라 비핵·개방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비핵·개방·3000 정책은 북한의 체제전환이나 정권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을 통한 생존전략에 호응하고 지원하는 북한발전 및 근대화 전략이다.

다. 북한 역사에서의 의미

비핵·개방·3000 정책은 북한이 처해있는 체제불안의 원인에 대한 파악, 체제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한 생존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파악한 토대위에서 북한의 생존전략에 상응하는 방향의 대북전략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동시에 북핵문제, 북한문제 등 한반도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정책으로 개발되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편입하는 것은 체제유지에 부담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현재의 고립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경제발전도 체제유지도 점점 더 어려워진다. 고립의 끝은 내부로부터의 저항에 의한 붕괴 아니면 원조를 매개로 한 외부로부터의 개입이다.

북한이 경제난, 국제적 고립, 안보 불안 속에서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였고 출구를

찾지 못하여 권력 엘리트층마저도 동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핵·개방·3000 정책은 북한에게 탈출구를 열어주는 것이며 생존 전략을 제시해주는 것이다. 북한이 회구하는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와 국제사회 편입이라는 돌파구 마련을 지원해줌으로써 사회주의국가들이 체제위기에서 체제를 희생한 보편적 역사의 길을 북한도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다. 북한의 역사에서 전환점이 될 정책방향을 제시해준 것이다.

북한은 인민경제의 개건·현대화를 해마다 신년공동사설에서 되풀이하고 있지만 아무런 정책의 수단도 없는 빈 구호일 뿐이다. 북한이 경제를 개건·현대화하기 위해서는 비핵화, 개방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북한은 실제로 핵문제 해결을 희망하고 있지만 미국은 한동안 북한의 핵문제에 대하여 강경자세를 취하고 대화는 해도 협상은 하지 않는다는 전략을 추진해왔다. 소련 붕괴이후 북한은 미국의 주요 적대국으로 지목되면서 고립·봉쇄·고사를 당하고 있다. 북한이 살 길은 비핵화·개방화 하여 미국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국교정상화를 실현하는 길이다.

비핵·개방·3000 정책은 궁지에 몰린 북한을 한미간의 협의를 통하여 비핵화·개방화를 조속히 실현하도록 지원하고 도와주는 정책이다. 비핵·개방·3000 정책이 추구하는 북한의 비핵화, 개방화, 경제발전은 북한이 가야할 길이며 북한이 가기를 원하는 길이다.

남북간에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은 남북간의 시각에서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의 해법이라면, 비핵·개방·3000 정책은 국제관계의 맥락에서 북한의 생존의 길을 제시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6·15공동선언 및 10·4정상선언과 비핵·개방·3000 정책은 상충적인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것이다.

4.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태도

지난해 10·3 북경 6자회담 합의로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확실해지면서 그리고 남한에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전처럼 북한에 끌려가는 대북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 확실해지자 북한은 이참에 남한 길들이기 겸 내부통합을 위하여 통미봉남 정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연말 연초에 우리민족끼리라는 구호하에 추진한 남북교류의 성과를 검토하고, 이것이 북한 내부에 미친 후유증을 우려하여 대남전략을 바꾸는 방향으로 정책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기 대남사업을 담당하였던 권호웅, 정운업, 최승철 등을 면직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우리민족끼리”라는 전략 자체가 어느정도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재검토한 결과 큰 실효가 없었다고 평가하였다고 한다. 제3의 서해교전, 제2의 625라는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남북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대신 미국에는 양보를 하고 있다.

이제는 미국과 관계개선으로 체제유지를 기도하고 대신 남북관계 긴장을 체제통합용으로 활용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개선시 대남관계 차단은 가상의 불만의 타겟용으로 유용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대남관계를 긴장시키는 전략은 10.4선언 합의 불이행의 책임을 남한에 전가하고 남한을 비난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내부교양의 자료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남한을 능멸하는 방식으로 비방전을 하고 있다. 서울 찻더미, 제3의 서해교전, 제2의 6·25전쟁 운운하면서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이유는 대남관계를 가 능하면 경색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런 대남적대감 고취는 전 주민의 인민반 사상교양에서 강조되었고 북한 군부내에서도 이루어졌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은 이러한 대남적대감 고취의 사상교양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될수록 북한이 남북관계 긴장유지 전략을 지속한다고 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이다. 즉, 북한이 그토록 미제국주의에 대한 비방과 반미주의로 체제내부 통합을 유지해온 상황에서 미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실현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충격적이 사건이다. 이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북한은 지난 2월에 뉴욕필하모니를 초청하여 공연을 하게 함으로써 북미관계 개선의 부작용에 적응하는 연습을 하였다. 지난 5월 15일에 미국의 대북식량지원 50만톤 지원 사실을 신속히 보도하였고, 또한 미국의 식량지원이 부족되는 식량문제 해결에 일정하게 도움이 되고 북한과 미국 두 나라 인민들 사이에 이해와 신뢰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최근에는 북한의 식량난이 가중되자 미국의 대북식량지원 사실을 적극 홍보하면서 식량난에 동요하지 말도록 간부와 주민들을 독려하고 있다.

북한이 3월말부터 대남공세를 시작한 이유는 북한이 사전에 준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김하중장관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 김태영 합참의장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 속사포처럼 비방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이다. 통일부 장관의 발언과 합참의장의 발언이 나오기 전에 이미 남한의 총선시기를 기해서 공세를 전개한다는 전략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통미봉남 전술을 고수하는 또 다른 이유는 북미관계가 진전되는 한 한국은 미국의 노선에 따라온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 50만톤이 지원되면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지금 어렵다고 해서 남한에 머리숙이면 이명박 정권 내내 남한에 끌려다니게 된다고 북한 당국은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이것이 북한이 남한에 대하여 기싸움을 전개하고 있는 이유이다.

북한은 북·미관계 개선이후 북일관계 개선과 더불어 서방국가들과의 국제협력관계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남한에만 의존하던 지난 10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폭넓게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미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국가, 서방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함으로써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영향력을 상쇄하려는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생존전략을 대남교류협력에서 국

제협력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셈이다. 북한은 가능하면 남북관계는 막고 대외관계로 생존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김정일 체제의 생존전략은 다양한 외국자본 유치를 통하여 남한흡수통일을 억제함으로써 남한에 흡수통일 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반통일적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5. 김정일 건강이상 이후 북한의 향방

김정일이 병상에 있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현상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의심스런 행동을 하다가 숙청을 당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더욱 충성맹세를 강화하는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 서기실, 국방위원회, 당 비서국이 정상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건강이 더 악화될 경우, 또는 김정일이 사망할 경우는 독재자를 대체하는 공식 국가기구가 제기능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가령, 당 정치국을 보선하여 정책 결정 기구로 기능함으로써 실질적인 집단지도체제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 집단지도체제의 수장은 당총비서이기 때문에 정치국의 결정에 따라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을 선출하고, 당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당총비서를 선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북한은 안정된 행보를 보일 것이다. 급변사태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총비서 선출과정까지 극비에 진행하고, 전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반대나 저항할 여지를 차단할 것이다.

북한에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 개인숭배를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체제가 개혁개방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

6. 남북관계 전망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 국제사회에 편입하는 것은 지금까지 사회주의 국가들이 걸어온 보편적인 길이었고 북한의 경우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는 것이 이 글의 인식론적 기초이며,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정책은 이러한 보편적 세계사의 흐름에 북한을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제안이다.

지난 10년간 대북포용정책의 추진 결과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는 성과가 있었지만 지난 10년간의 대북 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데서 이 글은 출발한다. 이 글은 남북관계가 취약한 원인은 북한의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으로 인한 안보불안, 경제난, 남한으로 부터의 흡수통일의 우려 등에서 온다고 보고 이를 감안한 대북정책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비핵·개방·3000 정책은 체제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한 생존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 과악한 토대위에서, 북한의 생존전략에 상응하는 방향의 대북전략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동시에 북핵문제 등 한반도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정책으로 개발되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편입하는 것은 체제유지에 부담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현재의 고립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경제발전도 체제유지도 점점 더 어려워진다. 고립의 끝은 내부로부터의 저항에 의한 붕괴 아니면 원조를 매개로 한 외부로부터의 개입이다.

이 정책이 현실성이 있는 이유는 핵협상을 통하여 미국과 국교정상화를 실현하여 국제사회에 편입함으로써 안보문제와 경제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북한의 생존전략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 정책이 서로 이해관계가 합치한다는 사실에 있다.

북한이 단기적으로는 비핵·개방·3000 정책을 거부하고 있지만 이는 김정일 정권이 단기적인 국내적 정치논리에 의한 것이다.

북한이 경제난, 국제적 고립, 안보 불안 속에서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였고 출구를 찾지 못하여 권력 엘리트층마저도 동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핵·개방·3000 정책은 북한에게 탈출구를 열어주는 것이며 생존 전략을 제시해주는 것이다. 북한이 회구하는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와 국제사회 편입이라는 돌파구 마련을 지원해줌으로써 사회주의국가들이 체제위기에서 체제를 희생한 보편적 역사의 길을 북한도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다. 북한의 역사에서 전환점이 될 정책방향을 제시해준 것이다.

비핵·개방·3000 정책은 궁지에 몰린 북한을 한미간의 협의를 통하여 비핵화·개방화를 조속히 실현하도록 지원하고 도와주는 정책이다. 비핵·개방·3000 정책이 추구하는 북한의 비핵화, 개방화, 경제발전은 북한이 가야할 길이며 북한이 가기를 원하는 길이다.

북한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다면 개혁·개방으로 정책변화가 촉진될 가능성이 높다. 정책방향이 개혁개방으로 전환된다면 비핵·개방·3000 정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 남북관계는 활기를 띌 수 있을 것이다.

(9월 23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